



삼성증권 김태현 광주지점장은 신세계와 오스템임플란트를 추천주로 꼽았다. 김 지점장은 신세계의 경우 단기적인 모멘텀이 약하고 주가이익비율(PER)이 19배로 부담스런 수준이지만 2분기 이후 고정비 부담이 축소돼 양호한 이익성장기조를 회복할 전

망이라며 1분기 주가약세를 매수기회로 활용하라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인공치아) 부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향후 임플란트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가 약세를 매수 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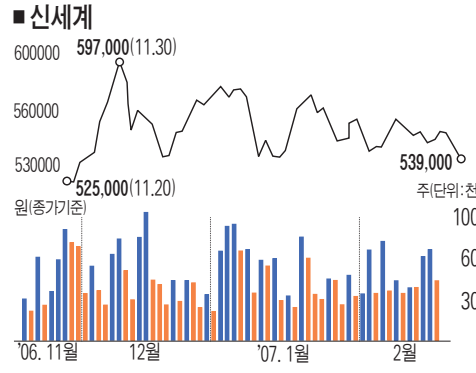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

■ 신세계

할인점 1위, 백화점 3위의 국내 대형 유통업체. 1963년 삼성이 동방생명과 동화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신세계백화점으로 유통업을 시작해 현재는 백화점 5개점과 할인점인 이마트 10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탄탄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점이 장점으로 신세계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도 지난해 인수한 월마트의 신세계마트, 조선희호텔, 스타벅스코리아, 신세계푸드 등이다. 또 신세계 건설(32.4%)과 광주신세계의 지분도 10.42% 가지고 있다.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지난해 9조5천533억원을 올려 25년만에 롯데쇼핑을 누리고 유통왕좌를 탈환했다. 이같은 성장배경에는 매년 10개 내외의 점포를 낸 이마트가 있고 신세계 전체 매출의 90%가 이마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주가가 59만8천원으로 사상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넘어서는 나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지만 올들어 가격부담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가에서



는 신세계 향후 주가를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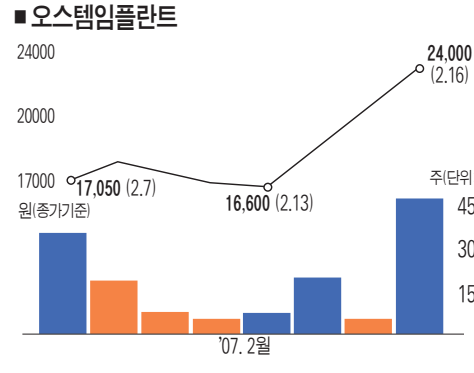
현대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은 1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18.8%에 달할 전망이고 영업가치와 삼성생명 지분가치를 감안할때 최근 주가약세를 매수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한화증권과 JP모건증권 등은 최근 주가상승으로 추가 상승여력이 크지않고 월마트 인수비용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도 부담스럽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 오스템임플란트

치과용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치과의료기 자재 전문업체다. 1997년 치과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출발한후 2000년 ‘수민종합치재’를 인수하면서 치과용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 변신했다.

국내시장 점유율 40%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1천97억원의 매출액에 19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2003년 이후 70%가 넘는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전체 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노벨 바이오케어, 스토로만, 3사 등 ‘빅3’에 이어 6위 업체로 해외시장 점유율은 3%대다.

이에따라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 2005년 대만 현지 판매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최근 중국까지 9개의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현지 생산과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업체가 방대한 임상자료 축적으로 인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실수요자인 치



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교육과 영업망을 구축해 고속성장을 해왔으며 올해부터는 해외에서의 성과가 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후 8일밖에 거래가 안된 새내주로 1개월까지는 총 발행주식의 50%가량인 712만주만 거래된다. 하지만 기관과 벤처금융기관의 보호에 수 물량이 상장 1~2개월후 풀리지만 당분간 주가 변동폭이 클수도 있다.

〈글〉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업인 3명 중 1명 꼴 “농업 개방 불가피하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자유무역협정(FTA)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장 민감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농업인 3명 가운데 1명은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의 경우 40%가 개방을 지지했고 절반 가량은 개방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보상하는데 자신의 주머니를 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19일 전국 도시 거주 19세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과 농업인 8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농업인의 26.6%는 “개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개방

해야 한다”는 대답도 2.8%를 차지, 지지 의견이 전체적으로 29.4%로 집계됐다. 반면 49.5%는 “국내 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20.3%는 “더 이상의 농산물 개방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시민의 경우 ‘보호론’ 비율이 60.7%로 농업인보다 10%포인트 낮은 반면, ‘찬성론’은 39.2%로 농업인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그러나 대도시도 시민들도 심정적으로는 농민들의 개방 반대 움직임에 공감을 표실했다.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가장하고, 국산과 수입산의 선택 조건을 묻자 도시민의 37.4%가 “국산이나 수입이나 안전성을 고려해 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진공청소와 스팀청소를 동시에 LG전자가 19일 진공청소와 스팀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스팀 사이킹’ 신모델(V-KS785MJA)을 출시했다. /연합뉴스

공정위, 사상 첫 ‘경쟁정책’ 해외 수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경쟁법 집행과 사건처리 노하우 등을 수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오는 4월 말께 몽골에 직원 1명을 파견해 몽골 경쟁당국인 ‘불공정경쟁관리처(UCR)’에 경쟁정책 관련 노하우 등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부터 경쟁법 집행관련 노하우를 배워온 적은

있으나, 해외에 관련 지식과 절차, 노하우 등을 전수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의 이번 직원 파견은 경쟁정책 집행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몽골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전해주므로써 역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연합뉴스

Table with columns: 로도복권 (제220회), 팝콘복권 (제43회), 순위, 당첨금(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 수

건강보험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 공개

보건복지부

앞으로 입원일수와 내원일수를 허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실명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을 위

부에 공개키로 하고 이처럼 외부에 명단이 공개되는 허위청구의 유형을 확정지었다고 19일 밝혔다. 명단 공개대상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 치료나 투약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타내는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대상이 되는 허위청구의 정도와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추후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월평균 근로시간 6년새 13시간 감소

주 5일제 등 영향...작년 191시간

OECD 국가 중에선 여전히 최고

주5일제 도입 등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최근 6년새 13시간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등 최고 수준이어서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6년 1~1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91.4시간으로 전년 동기예 비해 2.9시간(1.5%) 감소했고 주당

근로시간도 44.7시간에서 44.1시간으로 0.6시간 줄었다. 내역별로는 월평균 정상근로시간이 2005년 176.7시간에서 작년에는 174.3시간으로, 초과근로시간은 17.6시간에서 17.1시간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0년에는 204.8시간에 달했으나 ▲ 2001년 202.5시간 ▲ 2002년 199.6시간 ▲ 2003년 198.2시간 ▲ 2004년 197.2시간 ▲ 2005년 195.1시간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최근 6년 동안 13.4시간 가량 감소했다. 근로시간 감소추세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일제 시행이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columns: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SK그룹 설문 ‘직장인 성공 비결’

대인관계 > 업무능력 > 성실성

SK그룹은 최근 신입사원 427명을 대상으로 직업선택에 관해 설문한 결과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능력으로 대인관계가, 회사 선택 기준으로는 이미지가 가장 많이 꼽혔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직장성공 능력으로는 대인관계 능력이 37%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업무능력이 30%로 2위에 올랐으며 성실성이 27%, 정보수집능력(13%)과 분위기에 따른 처세(12%)가 각각 3%로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는 꿈을 공유하는 비전제시형(172명, 40%), 유대와 조화를 이뤄내는 관계중시형(170명, 40%), 냉정한 상황평가로 대인을 만드는 분석형(13%), 비상시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형(7%) 순으로 꼽혔다.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리더십 유형은 관계중시형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분석형과 비전제시형, 지시형은 각각 24%, 13%, 5%에 그쳐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합뉴스

전직 고위급 인사들 줄줄이

상장사 사외이사행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속속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전직 고위급 인사들의 상장사 사외이사행이 줄을 이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오영 건국대 총장을, 건설 및 운송장비 제조업체인 수산중공업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전 남 삼성 KPMG 고문을 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SBS는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친 정해창 송실당교육재단 이사장을, 일신방직은 송사 전 교육부장관을, 계룡건설은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을 거친 김각영 변호사를 새 사외이사 후보로 내세웠다.

신세계도 서울지방국제법정을 지낸 이주석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황병기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새 사외이사 후보로 제시했으며 SK텔레콤은 삼달삼 전 재정경제부 관세국장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3년간 위법행위

광주 2,344건 전남 1,811건

국내 이동통신 3사 광주·전남지역 휴대전화 대리점들의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김태환(한나라당·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의원이 공개한 정보통신부의 '2004~2006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대리점 위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전국 601개 대리점의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SK텔레콤 1만4천560건 ▲KTF 1만2천389건 ▲LG텔레콤 1만8천474건 등 모두 4만5천423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 3년간 광주 49곳, 전남 17곳 등 66곳의 대리점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모두 4천155건(광주 2천344건·전남 1천81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보조금과 관련된 위법 행위가 95% 이상을 차지했고 나머지건은 부가 서비스 부담 가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지역 대리점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 2004년 566건(SKT 174건·KTF 355건·LGT 37건)에서 2006년 1천304건(SKT 401건·KTF 367건·LGT 536건)으로 급증했다.

김태환 의원은 “이번 현장 조사가 이동사 대리점에서만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상가 등의 판매점 현장 조사까지 실시할 경우 위법 행위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매출이 높은 판매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민간기업 10곳 중 6곳

사내정보 유출 무방비

민간기업 10곳 중 6곳은 내부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사내정보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김태환(金泰煥) 의원이 19일 공개한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대상 1천213개 기업 가운데 58.5%인 709개 기업이 사규나 규칙, 지침 등에 정보보호 대책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보호 대책 미수립률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8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천·경기 66.5% ▲강원 59.5% ▲대전·충청 49.8% ▲서울 49.4% ▲광주·전라·제주 49% ▲대구·경북 42.2% 등의 순이었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SO) 임명률은 평균 5.3%로 집계돼 100개 기업 가운데 5개 정도만 CSO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